

한미FTA의 도전과 국민주권의 의의

정치평론의 과제 - 정치와 정치공동체의 부활

남 해 경
한국학중앙연구원

I. 서론

한미FTA는 문자 그대로 보면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그러나 한미FTA가 단순히 무역의 수준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이 분리된 가운데 무역부문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에 의거하여 다루어져 왔다. 강대국들의 요구에 의해 이후 수차례의 다자간협상 방식을 거친 끝에 세계무역기구 (WTO)를 출범시켰고, 이후에는 쌍무협상방식으로 FTA (Free Trade Agreement)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문제는 FTA가 과거와 달리 무역부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하던 투자부문을 통합하고 있고, 비록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달려낸 경제 불력의 창설을 지향함에 따라 국민국가의 위상을 위협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점에 있다. 한미FTA를 위해서 한국이 개정해야 하는 법이 무려 200여개에 달한다는 분석은 FTA의 파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국이 헌법조항을 포함 200여개의 각종 수준의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임에 비해 미국은 단지 비준만 하면 그만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누가 한미 FTA 법안을 국가간 외교협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사실상 노무현정권의 FTA협상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제수준의 제도를 그대로 뜯어고치는 협상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로 매우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헌법조항을 포함하여 2백여개의 법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쳐 타국에 맞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요즘 한국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구호 "선진화"의 정체는 사실상 "미국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어도 한국에서의 "세계화" 또한 "미국화"를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점을 짐작케 해 준다. 그리고 이런 구호들은 한미FTA를 위한 환

경조성용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사회에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이래 어느새 “선진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선진화”는 말해도 “선진국”은 잘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선진국이 선진화에 비해 ‘국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박정희 시대의 구호인 “선진조국”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작동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그 보다는 세계화 및 미국화 시대에 국가는 그러한 선진화 및 세계화의 이념을 밀어 붙이는데 여간 성가시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한미FTA는 무역개방의 차원에서만 조망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적 양극화의 차원에서만 접근되어서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한미FTA는 정치의 지평까지를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무역개방의 차원과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의 차원에서만 주로 조망되었다. 한미FTA는 그 추진세력이나 그 비판세력 모두 경제와 사회의 수준에서만 다루어졌고,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정치적인 차원은 추진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모두 충분히 다루는데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미FTA 논의의 장은 바로 정치가 배제된 채 오로지 그 경제적 손익만을 다투는 논리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파동에서 비로소 주권이라는 말이 등장함으로써 한미FTA에 결합되어 있는 정치적 차원의 일각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검역주권”이라든가 “국민건강주권”이라는 말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물론 주권이 정치의 모든 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닐 것이지만 정치의 매우 중요한 일면을 말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한미FTA는 정치의 지평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간 한미FTA는 그러한 기초적인 검토없이 단지 무역개방의 수준 및 경제적 득실의 수준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도 결국은 경제적 양극화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이 글은 한미FTA 논의에서 위기요인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 한미FTA 논의에서 정치적 지평이 추진세력이건 비판세력이건 간에 어찌서 그토록 단혀 있어야 했는가 하는 의문점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II. 한미FTA의 정치적 위기요인의 개요

한미FTA는 대한민국을 주권상실의 위기에 직면케 할 수 있다. 주권상실은 일제 하 을사늑약의 경우처럼 강압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주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의 결과 집합적으로 한국국민이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실효적인 차원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후에, 언제든지 여론이 유리해지면 주권탈취를 공식화하고, 가능하다면 국민 투표를 통하여 미국의 52번째주로의 편입을 공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민과 한국정부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한국의 주권이 이양된 것 처럼 보이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주권 및 한국정부의 통제력의 무력화가 공식적인 주권이 양 선언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과연 대한민국에 외교적인 독자결정권이 있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지 보수·우익정당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전 열린우리당 대표 신기남의원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자주라고 정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망언을 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전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제2의 조국"이라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공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저와 같은 발언에 미루어 볼 때 좌우를 넘어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자주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는 지 실로 의문이다. 실제 외교행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외교를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이나 박정희의 자주국방 및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노태우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그리고 김대중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경우 그런 대로 의미있는 자주적 결단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태대로 비준되면 한미FTA는 헌법조항서부터 조례에 이르기까지 200여개가 넘는 법을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거대한 제도적 격변을 수반하는 사안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게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거대한 제도상의 변화가 사실상 한국의 주권 박탈을 공식화하지 않더라도 한국정부를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국가·투자자 제소조항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외국기업이 정부를 국제재판소로 끌어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미국의 법문화의 일부에서 보듯 만일 정부의 공공적 개입에 대해 미국기업이 일일이 소송을 한다면 소송비 뿐만 아닐 패소할 경우의 보상비로 인해 정부는 재정상으로도 이를 견뎌내기 어려울 것

이다. 그리고 그러한 소송의 결과는 하나씩 하나씩 판례로 정립되어 한국정부의 사후약방문적 통제의 폭을 좁혀 중국에는 정부는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부르조아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한미정부간 서명한 비준안을 공개하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을 없애달라는 요구까지 한 일이 있다. 한미FTA가 비준되기 전에도 이미 한국의 금융주권은 유린될 대로 유린되어서 금융감독위원장이나 한국은행장을 외국인으로 임명하지는 주장이 공공연히 등장한 바 있다. 여기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폐지는 눈치만 살피던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더구나 일단 한미FTA를 비준하면 개방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개정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마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종의 부칙조항인데 참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개방된 것은 단지 무역개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방까지를 의미할 것이다. 한번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되돌릴 수 없다는 억지조항이 아닐 수 없다. 한미FTA의 전제조건으로 설정된 쇠고기 수입개방의 경우도 바로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일단 협상종료된 사항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조항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한미FTA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관한 조항이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로 인정받아 왔고, 김대중 정부까지만 해도 이는 널리 받아들여진 조항이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이래 남과 북은 국제적으로는 각각 개별적인 주권국가로서 인정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남북간의 무역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 문제를 저울질 하고 있는 사안이 바로 개성공단의 지위문제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1천만평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5만평이 개발되어 있고 공장부지는 고작해야 1만평 규모가 운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 미국은 이미 남북한의 국가분리가 남북동시유엔가입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제 한미FTA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미국의 일원으로 “깔끔하게” 통합하고 싶어하지만,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아온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의 지위로 인하여 남북관계를 동시에 풀지 않는 한 미국의 그러한 의도가 원하는 대로 손쉽게 관철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 외에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공식문서로 존재하여 남북유엔동시가입 정국의 남북분리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문서이므로, 한미FTA를 절실히 원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보다 당면한 처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한미FTA에서 지금까지 인정된

그러한 예외조항을 인정치 않으려 하였다. 민족내부거래라는 논리를 지워버리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남과 북 모두와 외교관계를 트는 그림을 상정할 때 미국은, 한편으로 한국을 미연방의 일원으로 지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 등거리관계를 유지하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 민족내부거래의 논리에 입각한 개성공단은 미국으로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고 할 때, 개성공단의 지위문제가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면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문서상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는 단순히 남한과 미국의 관계로 환원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남북기본합의서는 단지 문서상의 선언에 그치고 실제로는 한미 FTA 등에 의해 그 힘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또한 한국에게는 정치적 위기의 일면을 구성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한국의 주권에 충분히 위협적인 진행사항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미FTA는 통상협정이나 투자협정이 아니라 국가통합조약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성격을 정부는 국민에게 충분히 알렸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이명박정부가 국민을 가볍게 보았다가 고생하고 있지만 노무현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통상부문만 보더라도 노무현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무역적자의 심화 폭을 축소발표 하였다가 들통이 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하의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주장한 바 있다. 노무현정부는 초기에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하였다가 국민의 저항을 받은 바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행태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은 엄청난 변화를 물고을 조약의 비준을 앞두고 전모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국민주권이 희롱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미 FTA의 정치적 위기로인의 내용이다.

Ⅲ. 한미FTA의 정치적 위기로인에 대한 진단부재의 원인

이상은 정치적 위기로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적어본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한미FTA 반대진영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투자자 제소규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할 때에도 그것을 “국민주권의 위기” 처럼 정치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횡포에 대한 고발”과 같이 계급론적이고 경제사회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째서 정치적 진단이 부재한 것일까? 한미FTA의 정치적 변화의 내용을 아는

것 만큼이나 그러한 변화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부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진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탈정치화현상에 해당한다. 기본적인 현실 자체도 탈정치화되고 있는데 더하여 그러한 정치현실을 진단하는 분석 및 평가자들의 태도 또한 탈정치적이라면 이는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첫째, 한국의 지식인과 관료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지속을 원치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지속을 바라지만 매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잘못된 담론의 영향에 의해 이들의 사고방식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숭미반복 및 세계화논리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선전선동에 의하여 세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한미FTA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지만 특정 계층에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여섯째, 정치적 문제제기가 공연히 신상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아 침묵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 번째의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자. 위에 제시된 다른 경우에 비해 이 경우는 보다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는 저마다의 판단에 맡기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는 저마다 국가의 주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지배담론의 영향으로 그러한 판단을 이론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전제하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IV. 한미FTA의 정치적 위기요인에 대한 진단부재와 지배담론의 왜곡

현재의 한국의 정치적 위기에 기여하고 있는 지배담론은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화는 다양한 사조에 따라 논리의 전개양상은 다양하지만 이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다. 그것은 한편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나 무정부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를 찬양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와 민족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제조류는 모두가 국가개념에 대해 적대적이다.

이들은 서로 적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국가개념을 갖고 있다. 그것은 헤겔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라고 근대적 조건에 대해 서술한 이래 협의적 맥락에서 정의된 소위 정치사회로서의 국가개념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국가개념은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공유되었다.

이후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를 좌파와 극우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은 극우의 분류법에 속하게 되었다. 좌파와 (경제적 자유주의) 우파는 서로 치열하게 대

립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친화력이 있다. 이들은 말하자면 이 시기의 후예들이기 때문이다.

매우 작위적인 결과이지만 이러한 역사진행의 결과는 새로운 세대들에게서 정치공동체 개념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좌파는 국가를 더 이상 정치공동체로 인식하지 않고 '부르조아 국가의 집행위원회' 정도로 보려는 경향을 계속 지녀 왔고, 우파는 국가를 개인의 자유의 폭력기구로서 이해하는 경향을 계속 지녀 왔다. 이후 국가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게 진화되어 왔지만 이러한 공통성이 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극단적인 미소간 냉전이 종료된 이후 한국사회에서 예컨대 안병직교수가 좌파적 입장에서 뉴라이트에 적극 가담하여 심지어 친일교과서론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붕괴의 이유 외에 국가에 대한 좌우의 이러한 공통된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또한 이러한 사태전개가 있었기에 과거 NGO세력과 세계은행은 서로의 대립을 깨고 세계은행이 이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구도가 새로이 형성되었다. 이때 이후 NGO는 세계화세력의 수족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담론의 차원에서 먹칠을 당한 '정치공동체' 개념은 더러 공화주의의 형태로 산발적으로 다시 등장하곤 하였다. 그러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 차원에서 도모된 것이었으므로 참여나 토론민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된 것이었지 자연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공존을 위한 집합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주권과 정부조직을 갖춘 '정치공동체'의 차원에서 공화주의가 거론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화주의의 애국주의의 전통이 간과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말하자면 공화주의 조차도 담론수준에서의 정치공동체의 제거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강조되기 시작한 '사회적' 관심에서 접근한 것이었다. 이후 모든 국가사회 및 사회운동의 난맥상은 사실상 탈정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지만 누구도 이를 정치의 회복을 통하여 치유하려 하지는 않았다. 사회운동가들의 수많은 거창한 모임을 만들고 분출시킨 다양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번 '운동의 위기'를 목청높이는 일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이 거듭되었으므로 그러한 사태가 치유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와 국가기구의 기본적인 구분은 늘 무시되어 왔으며 심지어 망각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세계화의 격류 속에서 이들은 마치 이러한 구분은 세계화 조류 속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인 양 간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은 인간공동체의 생래적 정치성을 말한 것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곧 사라질 인설은 아니었다. 인간이 구성하게 되는 정치공동체의 모습은 불가피하게 역사성을 반영할지언

정 정치공동체의 본질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정치공동체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공동체가 항상 나쁜 모습만 보이는 것도 아니다. 정치공동체나 시장이나 할 것 없이 그 자체로는 반드시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며 그런 점에서 그들은 중립적인 존재일 뿐이다. 또한 정치공동체가 파열되어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이 가장 완전하게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공동체에서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때이다. 만일 인간이 개인으로 살아가거나 결사체에 속해 있거나 가족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 인간은 늘 정치공동체를 필요로 하게 되는 반면, 제국은 정치적 잉여로서 반드시 그것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제국은 인간의 정치적 생래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사치스런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는 인간이 그에 도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언가 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치공동체가 반드시 동질적인 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치공동체는 동질적이면서도 이질적이며, 그에 따라 갈등은 정치공동체의 기본적인 환경이다. 정치란 공존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이 일으키는 활동이며 그러한 이질성을 조정하기 위해 그리스인들이 강조한 것은 바로 역지사지였다. 정치인들은 그런 점에서 스페셜리스트라기 보다는 제너럴리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정치공동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다원성(Plurality)로 개념화한 한나 아렌트의 생각도 이러한 인식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나 아렌트는 그러한 정치공동체의 생래적 정치성을 인간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치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독보적 위치를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정치공동체를 부정하고서 사회이론이 도달한 곳은 결국 정치적 잉여에 불과한 '제국'으로서다. 이는 세계국가론 등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그것이 미국의 무도한 패권국가화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일치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할 것이다.

정치공동체 개념을 상실한 사회이론이 갈 곳은 개인주의와 결만 번지르한 사회동포주의이며 그 공동체적 형태는 바로 세계제국일 뿐이다. 그 속에서 그들은 제국의 모든 횡포를 세계제국의 완성을 위한 제국의 수고 정도로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는 자들이거나 모든 형태의 권력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 자들일 뿐이다. 이들은 바로 세계제국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간 자들이다. 결국 저들의 삶은 정치의 결핍(무정부주의)이거나 정치의 과잉(세계제국)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저들은 사회적 연대를 목청 높여 외치며 여전히 국가(정치공동체로서)와 민족공동체를 폄하하는데 바쁘지만 그들의 사회적 연대는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달리

국가공동체)와 민족공동체가 파괴된 곳에서 차디찬 자본과 난폭한 시장의 지배현상만을 목격할 수 있을 뿐이다.

저들의 세계주의는 지배담론의 영향력을 통하여 지식인과 관료 그리고 언론인의 의식을 지배하며 잘못된 세계관을 유포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외교관들의 반성되지 않은 채 받아들여진 국제주의의 뿌리는 바로 그러한 사회이론과 세계화논리의 힘과 거대지배세력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공동체의 도탄과 세계주의 및 개인주의의 동시적 창궐의 사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한 것은 바로 헌법과 헌정주의이다. 정치공동체의 조직원리가 헌법이라고 할 때 그 헌법은 대내적으로 최고이고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정치공동체의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헌법의 지위를 인정하고 정치공동체와 국가기구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이해한다면, 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국민의 뜻에 의뢰하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국민을 홍보나 선전선동의 도구로 삼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러한 기본원리를 깨우치고 있다면 일국의 외교관이 자국민의 뜻을 먼저 묻기 전에 국제법 운운하는 일 또한 감히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모든 파행의 깊은 근원에는 바로 정치공동체와 국가기구의 구분에 실패한 때문이며, 정치공동체의 파괴가 자리잡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정당화의 논리의 순서를 뒤집어 국가기구가 정치공동체를 규정하려 들고, 대내적인 문제는 국가간 문제든 엘리트들간의 결정은 뒤집을 수 없는 존엄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과정에서 보이는 끝없는 말바꾸기와 자기정당화, 그리고 외교관들의 국제주의 및 협상결과주의는 바로 이러한 전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 마지막 포효는 바로 한미FTA는 헌법의 위에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바로 그때 정치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의 목숨은 끊어지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은 정치없이 개인주의와 세계주의의 양극으로 원심운동을 거듭할 것이며, 금융자본주의와 무도한 세계패권주의 세력의 지배 속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일제 36년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불구 반세기만에 다시 그러한 암흑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V. 결론

한미FTA의 정치적 위기는 바로 주권상실의 위기로 대표된다. 그러한 주권상실의 위기의 도래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사회과학의 담론의 왜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잘못된 담론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치현상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실천의 세계에서 그러한 현상은 날로 가시화되고 있다. 한미FTA의 국가주권 파괴현상은 그 생생한 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국가파괴현상은 정치공동체와 국가기구의 위계, 국민과 위정자의 위계를 허물고, 종북이 주인을 지배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건과 한미FTA의 협상과정을 돌아다 볼 때,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국제주의와 국민의 종북의식의 상실현상은 바로 이러한 왜곡의 구체적인 사례로 예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나열한 바와 같이 한미FTA의 절차 과정 및 목표와 협상가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왜곡된 사회과학 담론의 폐해가 매우 크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과학 담론의 왜곡은 또한 역사성을 담아내고 있고 지배세력의 고의에 의해 초래된 부분도 많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사회과학 담론은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 개념의 지위를 갖으며, 이데올로기 비판은 매우 중요한 정치평론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더욱이 그때 회복해야 할 개념이 정치공동체 개념일 때 정치평론에서 그 개념이 갖는 항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와 민족이 그 자체로 선이거나 악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FTA자체도 그 자체로 선이거나 악이지는 않은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협상안은 그것이 이미 노무현정부에 의해 마련된 협상안인 바, 단지 이명박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흔히 등장하는 논조처럼 정치세력간 다툼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서도 안되며,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처럼 통상주의에 매몰되어서도 안되며, 한미FTA반대 세력들의 주된 기조처럼 단지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로 환원되어서도 안된다.

한미FTA의 본질은 바로 정치공동체의 숨줄이 끊기느냐 마느냐에 있으며 '우리'의 완벽한 파괴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이며, 정치공동체=국가의 문제이며, 정치공동체와 국가기구의 구분의 문제이며, 정치공동체가 사회와 구분되는 결정적 이유인 주권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한미FTA는 국민주권에도 위배되며 헌법의 권위에도 도발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결여한 존재이다. 한미FTA가 이러한 왜곡을 시정되어 비준되지 않는 한 한미FTA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 전체에게 질곡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를 방치한 지식인 집단 전체는 역사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하여 장구한 담론의 왜곡의 역사를 바로 잡고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탈정치의 고질병을 바로 잡음으로써, 이 역사적 고비에서 우리 및 우리 후손들의 정치적 삶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